

통일 대박 논의의 경제적 검토

김 병 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통일대박론의 등장

올해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통일 대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대북정책과 통일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의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미쳤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통일 대박”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이후 정치권과 정부, 언론, 경제계, 학계에서 통일 논의와 담론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햇볕정책이 실행되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에는 장기적인 통일보다 단기적인 교류협력이 우선시 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통일비용 논의가 중심 화두로 등장하였다. 통일은 바람직한 것이나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에 기초해서 “통일항아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통일항아리를 만들어 준비해야 할 만큼 큰 비용이 드는 통일

이라면 왜 해야 하는지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못했고 통일이 얼마만큼의 편익을 가져 오는지도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한 언론이 2014년의 기획특집으로 통일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직후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필자의 주도 하에 통일이 매우 높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가능성을 추정하고 이 결과를 포함하여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반적 분석 결과를 이 언론에 제공하였다.

통일 편익 추정의 방법

통일의 편익을 추정한 기존의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골드만삭스(2009)는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GDP 수준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하여 제시한 최초의 보고서이나 추정의 구체적 방법론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통일 시 2050년 통일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8위, 2007년 달러 기준으로 동년도의 일인당 GDP는 남한 96,000 달러, 북한 70,000달러(2010년의 일인당 북한 GDP를 1,000달러로 가정), 통일한국 8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2010~2050년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부의 경제공동체 형성 용역 보고서(통일부, 2011)는 남북통합시 10년 동안 북한의 성장률을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18%, 16%, 11.5%로 추정하며 남한은 각각 4.7%, 3.2%, 그리고 2.3%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정의 방법론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성장률을 추정하는 외국계은행들이 성장회귀모형을 사용한다는 사실로부터 골드만삭스의 방법론도 이에 입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부(2011)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모형)에 따른 추정법을 사용했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두 보고서에는 어떤 요인들이 성장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통일대박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보다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통일의 효과를 추정한 연구들로서 Noland et al (2000), Noland (2000), Funke and Struilk (2005), Brown et al (2012), 송준혁(201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CGE모형, 2산업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콥-더글러스 성장 모형 등을 이용하여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 연구의 장점은 경제학의 이론적 기초 하에서 비교적 엄밀한 방법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균형을 다룸으로써 변수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경우 성장과 경제통합의 결과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계수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추정 결과는 통계자료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의 수가 제한된다는 점도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연구도 남북한의 (일인당) GDP의 장기적 추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 편익 추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 편익 추정은 경제학의 장기경제성장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와 체제이행국의 경제성장 경험에 관한 문헌을 기초로 남한과 북한이 2014년 경제통합을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남북한 각각의 성장률을 계산한 다음 이를 인구비로 가중평균하여 통합(통일)한국의 성장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남한의 성장률은 자본주의 국가가 다른 국가와 통합될 때의 경제적 효과를 각종 경제학 문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성장 요인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제도의 개선과 체제이행,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증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4~2050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경우도 통합의 효과로 인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7~0.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2050년 남한과 북한의 일인당 GDP는 각각 94,307달러, 64,019달러에 이르게 되며 통일한국의 일인당 GDP는 83,808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G20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통일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규모 면에서도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 됨을 의미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 편익 추정의 가정과 함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한국 GDP 추정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2014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로 체제이행을 시작하고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것이다. 10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된 이 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이러한 제도의 진전으로 인해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둘째, 2014년부터 북한의 시장경제화와 민주화를 기초로 남북한 경제의 통합(integration)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거시 경제 안정화와 더불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되지만 노동력의 이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셋째, 남북통합과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통합 혹은 통일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 불안정, 내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통일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줄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상의 가정은 2014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남북은 분리된 상태에서 정치적 통일에 앞서 먼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경제통합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즉 “2지역 1체제(시장경제)”가 되는 것이다. 이 결과 남한에서부터 북한으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전지출이 거의 없이 남한과 북한 경제 모두 통합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정치적 통일은 2030년 경 부터는 커다란 경제적 비용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30년에는 북한의 일인당 GDP가 6,000달러에 근접하여 현재 중국

의 일인당 GDP와 유사해진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지역으로의 사회안전망 지출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둘째, 2030년이 되면 북한의 일인당 GDP는 남한의 11.7%가 된다. 이는 현재 남한 내 일인당 지역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비율이 100 : 24.5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통일의 충격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북한의 일인당 GDP가 남한의 20%가 되어 정치적 통일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상의 추정치는 모든 상황이 최선일 때를 가정한 낙관적 추정치이다. 따라서 통일의 실제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우리 사회의 준비이다. 이러한 준비가 없거나 충분치 못하다면 통일대박은 실현될 수 없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대박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